

KNSI REPORT

현안
진단

2006/09/11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對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 □ : 과연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이태섭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I. 대결과 협상의 부침을 반복하는 북미 관계
- II.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장외 한판 승부
- III. 제재의 정치 군사적 효과와 북한의 선군정치
- IV.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미국의 정책 실패
- V.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위한 역포위 구도의 모색

●북한의 6자회담 복귀 對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
: 과연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I. 대결과 협상의 부침을 반복하는 북미 관계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은 아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강화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그동안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완화, 교착과 진전, 대결과 협상 국면을 거듭하며 많은 부침을 겪어 왔다. 1993년 제1차 핵 위기 이후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이후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이션, 2002년 제2차 핵 위기 이후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이 그것이다. 상당 기간 동안의 긴장 국면 이후 어느 한편의 또는 상호 일정한 양보에 의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었다. 북미 양국의 변화하지 않는 근본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패턴은 당분간 지속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해 ‘6월 위기설’ 과 같은 긴장 국면 이후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6자회담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변화의 필요성은 북한이 먼저 느낀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스타일 그대로, 강경 대응이었다. 그동안 유보해 왔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가 그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역시 북한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또 다른 강경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설이나 미사일 추가 실험 발사설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울지포커스펜즈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탄도 미사일 요격 시험도 있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북미 양국의 강경 입장이 맞부딪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북미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때문에 현재로서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은 요원한 듯하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 긴 호흡이 필요하다. 과연 어떤 계기를 통해 협상 국면이 전개될 것인가?

II.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장외 한판 승부

지난해 있던 제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은 경수로 문제였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절대로 북한에 경수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경수로가 포함된 공동성명에 마지막까지 서명을 거부하다가 중국의 외교적 압력 등 대세에 눌려 마지막에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 애초의 의도와 달리 국제적 대북 포위 구도가 아니라 미국의 역포위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불가피한 한발 후퇴였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공동성명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다.

여기서 미국은 국제적 대북 포위와 압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범죄국가’로서 북한의 위폐 문제와 마약 문제 등을 명분으로 한 대북 금융 제재가 그것이다. 6자회담이라는 장내 투쟁에서 한번 밀린 미국이 판세 전환을 위해 장외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화와 협상 보다 제재와 압박, 고립과 봉쇄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선 핵 포기를 강요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전환까지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약속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북미 적대 관계 속에서 안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핵 포기를 위한 전제로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제재와 봉쇄 속에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북한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양국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 상황에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를 영무새처럼 되뇌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중요한 것은 회담의 진전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화폐 보호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북한은 그것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 즉 북한의 선 핵 포기와 제도 전복을 노리는 “목조르기”로서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미국과 마주앉아 6자회담에서 핵 포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미국과 마주앉아 아무리 6자회담을 해봤자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 없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해 왔으며, 그러한 정책 변화의 징표로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북한의 기본 입장은 미국이 대북 금융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결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근거하여 대북 금융 제

재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 틀 안에서 금융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굴복만 있을 뿐, 북한과의 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양국의 입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먼저 양보하거나 상호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만, 서로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이 강경 대응으로 상대방의 양보와 굴복만 압박 강요하고 있다. 한 발 짝도 먼저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대단한 기세 싸움이다. 이 장외 한판 승부에서 승기를 잡으면 그 기세는 곧 6자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치 북미 대결의 마지막 최대 승부처를 보는 듯하다. 서로 대립 각을 세우고 강도를 높여가며 총력 투쟁을 벌일 만도 하다. 하지만 아직 승부는 나지 않고 있다. 승부가 쉽게 날 것 같지도 않다. 지리할 만큼 팽팽한 싸움이다. 과연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미국이 먼저 대북 금융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Ⅲ. 제재의 정치 군사적 효과와 북한의 선군정치

공격의 예봉은 미국이 쥐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 자금 중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다” 며, 러시아와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금융 기관들을 동참시켜 북한의 모든 국제 금융 거래를 차단 봉쇄하고자 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의 구축이다. 중국도 일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압박은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 효과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화하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혹은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북한의 표현을 빌면, 북한을 “고립 질식” 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 공세”, “전례 없는 봉쇄 작전” 이다. 북한이 느끼는 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악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여기서 미국은 “제재의 효과” 에 주목하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 효과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과연 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정치 군사적 효과로 이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 금융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 물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 과연 북한은 그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미국은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그것이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선군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 자주사상” 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선군사상은 “제국주의에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사생결단의 반제 투쟁 정신” 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이러한 선군사상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즉 북한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에 나온 사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선군의 길은 죽음을 각오한 반미 대결전의 길”이며, 김정일 위원장 역시 “선군정치는 죽음을 각오한 정치”, “총대에 사생결단의 의지를 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군정치” 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의 이른바 ‘총대철학’ 에 따르면, “총대의 성질은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원칙성에 있다” 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적들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적들과의 대결에서는 단 한번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사소한 양보와 타협도 그것은 굴복과 패망을 가져온다” 는 것이다. 때문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선군정치가 취하는 자세와 입장은 강경 고압” 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에 기초하고 있는바, 북한의 기본 입장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인민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의 기본 인식은 이와 동일하다. 즉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고립 책동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다. 적들의 군사 경제적 압살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경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길은 오직 총대를 강화하여 혁명 무력을 필승불패의 것으로 튼튼히 다지는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원칙적 입장은 지난 7월 19일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에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강경 정책에 초강경으로 맞서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혁명적 입장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양보와 타협은 금물이다 원쑤들과 최후의 결판을 낼 때까지 강경하게 맞서 싸우는 길만이 제국주의의 기를 꺾어놓고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 견결히 맞서 싸우는 투철한 반제 자주 정신을 구현한 정치이다. 어떤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원쑤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투철한 혁명적 원칙성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념과 배장이 선군정치에 체현되어 있다. 총대에 결사의 의지를 더한 우리의 선군정치는 미제의 그 어떤 강압과 위협, 제재와 봉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미제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피로써 사수할 것이다.”

IV.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미국의 정책 실패

그간의 행태로 보아 북한의 이러한 언명을 공허한 수사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단순한 빈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 금융 제재와 봉쇄, 국제적 고립과 압박으로 북한 경제가 아무리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을 한 번 더 하면 더 했지 미국에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하거나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중국과 남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경우에도 - 물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듯하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봉쇄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북한으로서는 6자

회담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그저 주관적 희망 사항에 불과하거나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일 뿐이다. 북한은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의 일정한 양보가 없는 한, 대미 결사 항전의 의지를 더욱 다지면서 미국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등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사일 실험 발사가 그것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압박이 계속 확대 강화될 경우,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실험 발사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든 미사일 추가 실험 발사든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에 그 어떤 강력한 제재나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결코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력, 고립과 봉쇄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제재나 압력, 고립과 봉쇄가 있을 경우 그에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 남한 등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단행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 각오하고 미사일 실험 발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며,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 없이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압박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 등 국방력 강화였던 것이다.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지적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이른 것은 미국이 대북 금융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사태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큰 것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다소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북한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조만간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이 “대북 금융 제재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타격을 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듯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미국의 정책 실패이다. 제재의 정치 군사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압박이 계속 강화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계속 강화될 것이며,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이나 남한도 원치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미국은 6자회담과 대북 금융 제재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전제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6자회담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중국 역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폐 문제에 대해 북한, 중국,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듯, 중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조해 왔다. 중재자로서의 중립성도 다소 부족한 듯했다. 이것은 남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눈에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대북 포위망 형성에 남한과 중국이 일부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남한과 중국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북한이 일정한 불만을 가질 법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적으로 포위 고립된 상태에서 6자회담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박길연 유엔 대표부 대사의 발언대로, 미국의 대북 포위 전략이 강화될수록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중국과 남한에 대한 그러한 불만의 표출이자, 그러한 미국의 국제적 대북 포위 구도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남한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태 악화에는 중국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북중 관계에 일정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는 미국의 대북 포위 구도에 파열구를 내면서 중국을 다시 견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V.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위한 역포위 구도의 모색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남한과 중국의 자세에도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전보다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미국의 새로운 포괄적 대북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미국에 요청하며, 창의적이고 신축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한과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도 북한이려니와,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문제는 그 방안이 없어 아직껏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적인 반자금 세탁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가 크게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다. 하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 그런 만큼 북한에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또 그동안 미국에 성의를 보일만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할 차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의 지적대로,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 미국의 일정한 양보 없이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 양국은 상호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남한과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그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을 설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BDA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제4차 6자회담의 구도로 복귀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 압박하는 대미 역포위 구도의 형성이 그것이다. 이때 북한은 마침내 6자회담 복귀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근 1년 만에 제4차 6자회담에 복귀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시사하는 바, 그 트랙(track)은 아직도 유효한 듯 하기 때문이다. 